

정부, 과잉진료에 철퇴...과태료 상향 조정

진료비 병원마다 최대 80배 차이 국회, '수의사법 개정' 적극 추진 수의사회 "모든 책임 병원에 전가 정부가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을"

반려인들의 고민 중 하나가 동물병원 진료비다. '동물병원 진료비는 부르기 나름'이라는 말이 통설처럼 떠돌기 때문이다. 한 반려인은 "동물병원에 다녀오면 진료비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적정하게 청구된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토론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해 서울·경기 지역 소재 동물병원 50곳의 진료비를 조사한 결과, 진료비를 게시한 곳은 18%에 그쳤다. 병원별 가격 편차는 최대 80배까지 났다. 특히 치과 관련 진료항목 가격 차이가 가장 컸다. 발치가 최대 80배, 치석제거가 최대 35배였다. 중성화수술은 병원별로 약 5배 차이가 났고, 예방접종은 항목에 따라 2배~4.7배까지 벌어졌다. 초진료는 6.6배, 입원료는 4.5배 차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반려인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진료비 폭탄 대처법'이나 '과잉진료 대처법' 등 비법을 공유하는 글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반려인들은 최소 3군데 병원을 돌며 진료비를 체크하기도 했다.

수의사들은 동물병원 진료비 갈등을 해결하려면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진료비 부담의 모든 책임을 동물병원에만 전가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반려인들 사이에서 동물병원 과잉진료 논란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이에 정부는 과잉진료 과태료를 상향 조정했으며, 국회에서는 관련법안이 제출됐다. 사진제공 | 펫뉴스

이처럼 과잉진료 문제에 대해 인지하던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의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과잉진료에 따른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고 영업정지 시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당장 대한수의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수의사회는 "코로나19 등 경제 상황을 감안해 과태료 상향 반대 및 조정 의견을 제출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일부 위반행위는 무려 1500%나 인상한 반면 정작 과태료 인상이 필요한 수

의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미신고 등은 최저금액 수준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특히 과잉진료 문제에 대해서는 "동물 의료체계의 전반적 발전 도모보다 강아지, 고양이 진료비를 낮춰달라는 동물보호자의 민원을 위해 보여주기식 정책만 펴고 있다"고 했다.

국회에서도 동물병원 진료에 대한 기준을 세우기 위해 법안이 제출됐다. 미래통합당 허은아 의원은 동물 진료의 진료항목을 표준화하고, 진료비를 포함한 진료항목을 공시하도록 하는 수의

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질병명, 질병코드 및 진료행위를 포함한 진료항목의 표준을 정해 고시해야 하며, 동물병원 개설자는 고시된 진료항목의 표준을 고지해야 한다.

이처럼 동물병원 진료료 놓고 첨예한 대립이 펼쳐지는 가운데 반려인과 수의사가 모두 만족할만한 방안이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김효승 객원기자 inewsmann@nate.com



펫덕 대표 수의사 이태형 원장이 '펫허준'으로 변신해 수의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펫덕

건강신호 체크 & 무료 상담·예약 반려동물 업계 건강관리 서비스

고양이수의사회, 가이드북 2종 동물병원 비치

반려동물의 행동 변화가 생기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어디 아픈가'일 것이다. 여건이 된다면 반려동물을 데리고 바로 동물병원으로 가면 좋지만, 여러 이유로 내원이 어려운 반려인들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다양한 반려동물 건강관리법을 제시했다.

글로벌 펫푸드 브랜드 로얄캐닌은 '고양이 주치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보호자 이벤트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캠페인 활동에 나섰다. '고양이 주치의 프로젝트'의 온라인 페이지에서 반려묘의 건강 신호를 체크해보고 경품으로 건강검진권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9월 4일까지 진행한다. 이 외에도 한국고양이수의사회(KSPM)와 함께 반려묘의 특성과 건강한 반려 생활을 위한 팁을 담은 가이드북 2종을 발간하고 700여 개의 동물병원에 비치했다.

수의사가 만든 반려동물 통합 케어 플랫폼 서비스 펫닥은 자사 앱을 통해 무료 수의사 상담 및 동물병원 예약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브이케어' 대표 수의사 이태형 원장은 "꼭 수의학적인 질문이 아니라더라도 행동학 등 수의사의 영역이라면 질문하셔도 된다"라며 반려인의 참여를 독려했다.

IT 스타트업 넷세이프는 방문검진 서비스 플랫폼 '숨탈'을 출시했다. 숨탈은 반려인과 수의사를 연결해 준다. 보호자는 검진 결과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고, 반려동물은 익숙한 환경에서 진료를 받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다. 송동욱 넷세이프 대표는 "고양이나 노령 반려동물은 집에서 데리고 나오는 것이 쉽지 않다. 숨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수진 기자 sujini22@donga.com

펫트너, 중기부 팁스 최종 선정

수의사 등 반려동물 전문가 O2O 서비스 운영



반려동물 건강관리 스타트업 펫트너(대표 최가림·사진)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창업 프로그램인 '팁스(TIPS)'에 최종 선정됐다.

팁스 프로그램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 기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우수한 기술 아이템을 보유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의 가능성이 큰 스타트업을 발굴해 투자 및 육성하는 민간 주도형 기술 창업 프로그램이다.

이번 팁스 선정으로 펫트너는 '반려동물 생체정보 기반 돌봄 가이드 시스템' 개발을 위해 5억 원의 연구개발 자금과 최대 2억 원의 창업 사업화, 해외 마케팅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펫트너는 수의사가 창업해 수의사, 수의대생을 포함한 분야별 반려동물 전문가를 연결하는 온·오프라인 연결(O2O) 서비스를 운영하는 스타트업이다. 이수진 기자

편집 | 김대진 기자 bong82@donga.com

"반려동물 등록 때 인식표는 안됩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 21일부터 시행 내·외장 무선식별장치만 정식 인정 외출시 인식표 필수, 위반엔 과태료

동물등록 방식에서 인식표가 제외된다. 현행 동물등록 방식으로 내·외장 무선식별장치와 인식표가 있다. 하지만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커 동물을 잃어 버릴 경우 소유자를 찾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인식표는 동물등록 방식에서 제외되고, 내·외장 무선식별장치만 동물등록 방식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조치는 반려동물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반려동물 유기 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정책으로 기대를 모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제를 강화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1일부터 시행했다.

다만 동물등록 방식에서 인식표가 제외됐다 하더라도 반려동물을 데리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반려인의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를 반려동물에 달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반려동물 관련 사업자는 동물등록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규정했다. 동물판매



반려견에게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고 있다. 사진제공 | 농식품부

업자가 반려견 등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할 때 구매자에게 등록 방법과 기한, 변경신고 및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도 안내하도록 했다.

동물장묘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의 장례를 치른 후 반려인에게 변경 신고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동물장묘시설의 화장로 개수 제한은 폐지됐다. 현행법은 화장로 개수를 3개로 제한해 그동안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반려동물 수가 급증하면서 장묘시설을 대폭 확충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없앴다.

다만 반려동물 보유세 등 정점사항은 이번 시행규칙에서 제외됐다. 반려인의 책임감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김효승 객원기자 inewsmann@nat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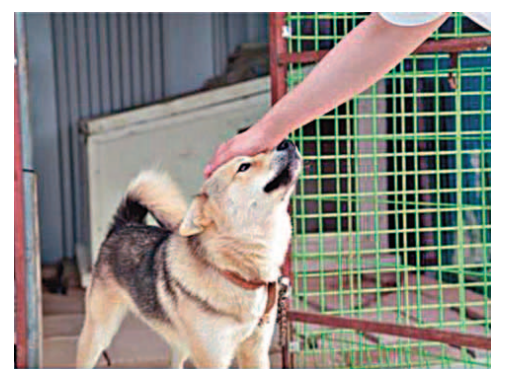
보호소 위장한 변종 펫샵 주의하세요

입양비·파양비 받는 형태로 '장사'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아 김포 아지네마을 "입양 검증 필요"

최근 강아지들을 분양하는 신종 펫샵의 비윤리성으로 펫샵이 아닌 유기견 보호소를 통해 입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있다. 신종 펫샵의 경우 '입양사 없는 유기동물보호소'의 이미지를 통해 '파양비'와 '입양비' 장사를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신종 펫샵은 반려동물을 파양하려는 보호자에게 위탁비 명목의 '파양비'를, 입양하려는 사람에게 '입양비'를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특히 파양의 경우 반려동물의 나이, 질병의 유무 등에 따라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돈을 지불하기도 한다. 특히 입양자가 재파양할 경우 펫샵은 상당한 금액의 파양비까지 챙길 수 있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보호소라는 명칭을 사용해 마케팅을 하고 있어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포털 사이트에 '유기동물 보호소'를 검색하면 해당 업체들이 상단에 노출된다. 그러나 보호소는 법령상 명칭이 아니므로 법적 관리를 할 수 없다.



신종 펫샵의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비난과 함께 입양 전후 철저한 확인을 거쳐 입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제공 | 아지네마을

펫샵 대부분이 이용자들에게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지난해 3월부터 반려동물의 품종, 생산일자, 건강상태 등 정보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의무화됐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기동물 보호소인 김포 아지네마을은 입양할 가정의 환경을 박정수 소장이 직접 확인하고, 입양 전 4~5년에 걸쳐 아지네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박 소장은 "입양 전 거주 환경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유기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책임감을 느끼며 입양해야 잘 지낼 수 있다"고 말했다.

박민희 객원기자 24news@naver.com

반려인 위한 세탁서비스 '헤이올리' 펀딩 준비



반려동물 털 묻은 세탁물도 OK

반려동물 보호자를 위한 비대면 세탁서비스 '헤이올리(사진)'가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을 준비한다. 헤이올리는 지역세탁소를 모바일로 연결하는 리화이트가 반려동

물을 키우는 고객을 위해 새롭게 출시한 모바일 세탁 서비스다.

헤이올리의 김현우 대표는 "반려동물의 털이 묻은 세탁물은 다른 세탁물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세탁 거부를 당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리화이트 서비스를 하

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고객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헤이올리 서비스를 론칭했다"고 밝혔다.

헤이올리는 이번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새롭게 론칭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은 물론 반려동물 가족을 주주로 모집해 투자자이자 고객인 '인베스토머(INVESTOMER)'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수진 기자 sujini22@donga.com